



정부, 감염병에 대비하라

전세계적 위협 : 감염병

지난 40 년 동안 감염병의 수가 3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조류 독감 H7N9을 꼽았다.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감염자 중 상당 수가 집중 치료를 요한다. 이것은 서 아프리카의 에볼라부터 남아메리카의 지카 (Zika)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 동안 확산된 치명적인 질병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질병일 뿐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집단 감염 사태는 인간이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테러 단체들이 대규모로 감염을 확산시키기 위해 생물 무기를 획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언제든지 시도 할 수 있다.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 모두 이러한 감염병의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연속성계획은 조직에서 직원의 안전과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계획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사업연속성계획이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수단과 협업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감염병에 대한 관련문서에서 WHO는 건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취해야 할 주요 조치 행동을 명시한다. 호주 정부는 사업연속성계획의 일환으로 "Pandemic Management Plan"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공공 부문 역시 건강 위협에 대한 사업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것은 건물이나 데이터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보다는 위기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적인 계획과는 다르다.

넘 놓고 있던 메르스 대응... 사스·신종플루 때보다 '허술'

과거 201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중동지역에서 지난 3년간 1천54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역시 456명에 달하는 등 치사율이 약 40%에 달하는 감염병이었다. 게다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지역을 다녀온 환자로 인해 단기간 내에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역시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메르스 환자 발생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활동에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다녀온 최초 환자가 2015년 5월 4일 귀국한 이후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4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들 의료기관을 거쳐 가면서 접촉자들 상당수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해당년도 5월 20일 최초 확진 판정 이후, 최초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4개의 의료기관과 이들 의료기관 내에서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파악 및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세 번째 및 네 번째 환자의 가족인 10번째 환자가 발열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무시하고 중국 출장을 강행했다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심증상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누락되고 이들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수의 3차, 4차 접촉이 발생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해있던 35세 남성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많은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켜 슈퍼 전파자 논란까지 초래되었다.



'과거 201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부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중동지역에서 지난 3년간 1천54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역시 456명에 달하는 등 치사율이 약 40%에 달하는 감염병이었다.'

초기 방역 실패 등 확산 자초

2003년 사스와 2009년의 신종플루 때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스와 신종플루로 인한 대규모의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경계하여 공항과 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면서 국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제 국경 검역 과정에서 의심환자를 검역을 통해 찾아내고 격리 조치하는 등 방역활동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신종플루의 경우 특허약인 타미플루뿐 아니라 예방 백신 역시 국내 자체 생산 제품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었고, 정부가 이에 대비하지 못해 메르스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장기변형 감염병'은 20년에서 40년 주기로 찾아오지만, 일본 뇌염, 백일해, 홍역 등과 같은 '단기변형 감염병'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주기로 찾아온다. 국가에서 감염병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메르스 이후 정부의 대책

정부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된 것이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소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감염병 유입 방지,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을 지원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림 1. 정부의 5개 부처간 One Health 계획

출처: 국민안전처, 2018 연두업무보고(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인포그래픽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

경기도 감염병 관리정보시스템

2017년 4월, 경기도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구축,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민간의료기관과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의 소통 부재와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1)위기대응 화상회의, 2)감염병관리 담당자간 협력 채널, 3)감염병 정보 공개 기능 등이다. 참가자들은 영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각 기관 간 환자 현황, 치료시설 현황 등을 공유하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해 신속한 위기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경기도청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가 위기 사태에 대한 매체 혹은 수단으로서 쓰일 뿐, 근본적으로 국가적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없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없이도 국가는 사업연속성 체계를 통해 핵심 기능을 복구 및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사업연속성관리는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이며, 이는 ISO22301:2012 기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그 위협이 출현하였을 때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 명성, 브랜드와 가치 창조 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역량으로 조직의 복원력을 수립하는 지속적인 관리프로세스이다. 또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업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기업 및 국가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연속성관리를 통해 국가는 어떤 재난/재해 속에서도 긴급 대응하고 국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제공할 수 있으며, 정상 기능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정부 및 공공대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이 존재하며, 올해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능연속성 또한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으로, 사업연속성관리와 유사한 계획 수립, 이행, 운영, 모니터링,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이라는 PDCA(Plan-Do-Check-Act)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맺음말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에 또 다른 메르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018년 업무보고에 One Health 체계를 발표했고, 비록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는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응체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에는 One Health 체계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연속성 관리(BCM) 혹은 기능연속성(COOP)을 도입하여 언젠간 닥칠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sources

『[2018년 업무보고] 복지부 “메르스 재발 사태 방지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MTN 머니투데이방송*, 정미경/유승호, 23 Jan. 2017, 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12311393115439.

이한솔. 『'국민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 One Health 구축.』 *메디컬투데이*, 김상원, 23 Jan. 2018, 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9138.

박경호. 『“우왕 좌왕 메르스 대응은 이제 그만! 집단 화상회의로 해결”우왕 좌왕 메르스 대응은 이제 그만! 집단 화상회의로 해결.』 *한국시/민뉴스*, 정동식, 25 Apr. 2017, www.newscitiann.com/detail.php?number=26046.

『국민안전 - 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2018.01.28

Gianluca Riglietti CBCI, and Lucila Aguada. 『HORIZON SCAN REPORT 2018.』 *BCI*, 2018.01, p. 13.

전병율. 『[특집 I]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 메르스 사태의 현황, 대응 및 개선방안.』 *과학과 기술*, vol. 556, Sept. 2015, pp. 18-21.
